특종 케냐 세계사회포럼 현지 보도 5면

크리스 하먼
베네수엘라와 연속혁명 4~5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8면
여성 칼럼 – 자본주의와 가족 6면
존 몰리뉴 칼럼 – 맑스주의와 억압 7면

30호 2007년 2월 3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난파한 열우당호 도망치는 쥐떼들

한나라당 독재의 후예

진보적 대안을 건설하자

열우당이라는 난파선에서 '승객'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임종인 · 이계안 · 최재천에 이어, 열우당 창당 주역 천정배마저 "타이타닉에선 뛰어내리는 게 상책"이라며 뒤를 따랐다.

이미 사분오열한 열우당의 나머지 '1등 승객'들은 망망대해에 뛰어들 자신감이 없어 배 안에서 "쥐떼"처럼 우왕좌왕할 뿐이다.

당내 최대 계파인 '실용파'의 우두머리 정동영도 탈당 시기를 짱 본다. 김근태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선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어쩌지도 못한다. 일부 "쥐떼"는 한나라당 배로 갈아탈지도 모른다.

노무현은 "차라리 내가 탈당하겠다"며 열우당 해체만은 막아 보려 했다. 29일 중앙위에서 친노 직계 그룹이 기초당원제를 수용하며 '후퇴'하자 탈당 러시가 주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

이들은 '신장개업'의 범위와 주도권을 놓고 또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2월 14일 전당대회는 열우당 '폐업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노무현과 열우당 사수파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은 개헌 '꼼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열우당의 파산은 자업자득이다. 노무현과 열우당 정권은 대중의 개혁 염원을 끊임없이 배신했다. 이라크 파병, '4대 개혁입법' 사기극, 한미FTA 추진, 비정규직 확산, 연금 개악,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배신의 목록은 끝이 없다.

이 같은 배신과 개악을 위해 아예 한나라당과 '신자유주의 · 친제국주의 대연정'을 하려 해온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반한나라당 전선'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배신 목록

최근에도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민생회담'을 하려 한다. 한미FTA · 국민연금 등 '개악 공조'할 의제가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진작에 나섰서야" 했다며 환영이다.

노무현과 열우당의 개혁 배신 때문에 열우당 왼쪽에 커다란 정치적 공백이 생겼다.

천정배 · 최재천 등 '열우당 개혁파'가 탈당으로 노리는 것이 바로 이 공백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 · 진보개혁 세력'의 통합을 외친다. '미래구상' 등 시민사회 운동 진영과도 연계를 맺어, 그 동안 잃어버린 옛 지지층을 모으려 한다.

사실, 천정배 등은 노무현과 열우당의 신자유주의 · 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 2004년에 열우당 원내대표였던 천정배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라크 파병 연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파병 연장에 앞장섰고 '테러방지법'까지 추진했다. 2004년 연말에 우익의 반발에 타협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유보'를 제안한 것도 천정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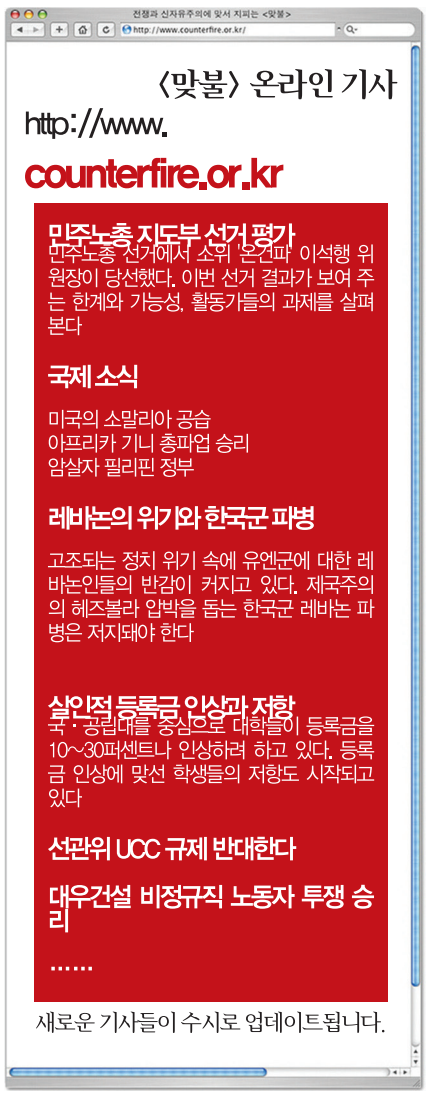
최재천은 레바논 파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여러모로 진보적 입장을 취해 온 임종인이 이런 자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천정배 등은 "열우당이 만든 상품은 그 효능과 품질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외면하는"(이계안) 현실을 볼 때 일단 "헤어져서 [있다가] … [대선 때]다시 만나는 쪽을 모색하자"(천정배)는 것이다. 천정배는 "어느 위치에 있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정동영도 "결국 대통합의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에 몰린 사이비 개혁가들의 절망적 도박과 꼼수가 난무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것을 "회사를 부도낸 뒤 채권자의 빚 독촉을 모면하려[는] … '위장 이혼 작전'"이라고 비꼬았다. 〈한겨레〉도 "별 차이가 없는 정당을 새로 만들자고 당을 떠나거나 깨자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런 사기극을 폭로하면서 열우당 붕괴로 형성된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취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

▶ 3면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 '다함께'의 주간신문 〈맞불〉 ■ 발행인 김인식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인용해도 될까요?

이명박: "애를 안 낳은 사람은 교육이나 보육 문제를 맡을 수 없다."
박근혜: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냐."
원희룡: "'아버지 직업이 뭐냐', '아파트 몇 평에 사냐' 등 동네 애들 싸움과 비슷하다."
– 한나라당의 내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를 보면 한나라당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 통합신당을 하겠다지만 결국 화장만 고치겠다는 것"
– 임종인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 방향으로 달려 나갔다."
– 최장집 교수

"나도 그가 당선됐을 때 매우 좋아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나 부동산 문제로 과거 청산의 법정에 끌려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 한홍구 교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될지 아닐지는 미 의회 의사당이 아니라 서울의 거리에서 결정될 것이다. … 한국의 시민사회가 앞으로 남은 10주 동안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만 있다면 FTA라는 위협이 격파될 것이다."
– 로리 왈라크 미국 '퍼블릭시티즌' 국장 , 토드 터커 '퍼블릭시티즌' 연구국장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1월 23일 택시 노동자 전응재 씨가 인천 택시회사인 우창기업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의 1차적 원인은 택시 노동자들의 끔찍한 노동 현실과 악독한 기업주에게 있다.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주야 맞교대라는 혹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우창기업은 차량에 GPS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이를 이용해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4대 사회보험법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최근에는 임금을 무려 15만 원이나 삭감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3명을 해고해 버렸다.

그런데 전국민주택시연맹(이하 민택) 인천본부 지도부가 이런 공격을 수용하며 배신적 합의를 한 것도 전응재 열사의 죽음에 한몫했다.

민택은 2002년 월급제를 쟁취하려고 전국적인 파업을 벌였다. 민택 인천본부 소속 작업장 27곳 전체가 파업에 돌입했고, 65일 간의 파업 끝에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쟁취했다.

당시 민택 인천본부가 쟁취한 협약 13조 2항은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로, 이 제도를 적용하면 임금 인상 효과뿐 아니라 연월차 등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을 집요하게 없애려 했다. 그런데 민택 인천본부 염창만 본부장은 이에 맞서기는커녕 13조 2항이 삭제된 협약을 조합원들에게 설득시키려 했다. 그러면 15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임금이 깎이는데도 말이다.

인천본부 지도부는 결국 13조 2항을 없앤 협약을 체결하고는 12월 1일 새벽 1시에 문자메시지로 산하 노조에 협약 체결을 통보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택 지도부의 배신에 침묵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구수영 민택 위원장은 '13조 2항 사수'를 약속했지만 임금협상안 발효일인 2007년 1월 1일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수수방관

노동자들은 '택시월급제 사수를 위한 비상모임'을 꾸리고 조합원 총회를 조직했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만장일치로 교섭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전응재 열사가 있던 우창기업 노동자들도 조합원 총회를 요구했지만 우창분회 김익환 위원장은 총회를 계속 연기했다. 심지어 우창기업 사측이 위원장 불신임투표를 주도했던 조합원 3명을 부당 해고해도 김익환 위원장은 수수방관했다.

1월 23일 열린 총회에서도 김익환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전응재 열사는 악독한 사측에 대한 분노와 비민주적 지도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분신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택은 열사 사망 뒤에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분신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번 사건은 더 큰 연대와 투쟁을 위한 산별노조와 산별협약이 때로는 오히려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투쟁을 가로막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줬다.

이 점에서 최근 결성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과 운수노조의 지도부가 산하 택시본부의 행태를 분명히 비판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인천본부의 야합을 방조한 구수영 민택 위원장은 강승규 비리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새로 당선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조합원을 중심에 세우겠다"는 약속대로 자신의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구수영 위원장과 민택의 문제점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 행동을 건설해 기업주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으로 열사의 뜻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강동훈

이영순 의원 공격

삼성의 대리인으로 나선 검찰

검찰은 1월 24일 "행정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2005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시 · 군 · 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납품업자 선정과 관련해 삼성SDS와 행자부의 유착 ·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삼성SDS는 2위 업체보다 자그마치 1백 10여억 원이나 비싼 값을 써내고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SDS가 납품한 제품 자체가 보안 기능이 허술한 엉터리라는 점도 폭로했다. 파주시청에서 사용중인 이 소프트웨어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의원은 "ID와 패스워드의 노출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임시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단 한 번 로그인"했을 뿐이다.

범죄를 위한 해킹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검증하려는 것이었는데도, 검찰은 불법적 자료 확보라며 이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밝혔듯이, 삼성을 고소한 사건 33건 중 고작 1건만 기소된 현실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익에 반해 삼성을 비호한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 오만하고 더러운 삼성 · 관료 동맹에 맞서 이영순 의원의 공익적 활동을 옹호해야 한다.

김문성

국가보안법 내세운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구속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전임 한총련 의장과 함께 류선민 15기 한총련 건설준비위원장에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공안기관들은 '친북', '기밀유출' 등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이들을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고 있다.

백보 양보해 설사 이들이 모두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지지하더라도 이는 사상의 자유에 속한다.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사상이 아니라 사상 ·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드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랬듯이 이시우 씨가 주고받은 사진도 녹색연합이 2005년 기자회견에서 공개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이다.

핵잠수함

그런데도 공안 정부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 …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협박했다.

이시우 씨가 '공유'했다는 사진은 지난 2005년 진해 해군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정박해 있는 것을 찍은 것이다. 이 잠수함에는 토마호크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당시에 실제로 핵미사일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을 두고 난리법석을 떨던 자들이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정박시켜 놓은 것도 그렇거니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드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노무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들을 '기밀'이라며 마녀사냥에 이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참에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비밀보호법'까지 추진하려 한다.

운동의 일부를 마녀사냥해 정치 위기의 속죄양 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우익과 노무현 정부, 공안 기관의 시도에 진보진영 전체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장호종

열우당의 와해와 민주노동당의 과제

민주노동당은 열우당 와해가 남긴 왼쪽의 공백을 메울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진취적 도전이 필요하다

정치적 양극화와 대중 의식의 급진화로 열우당이 와해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열우당 붕괴로 생긴 정치적 공백이 저절로 민주노동당의 공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6일 미디어리서치 조사를 보면 '통합신당' 지지율이 8.5퍼센트(열우당 9.7퍼센트, 민주노동당 6.3퍼센트)로 나타났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정당의 지지율임을 감안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치다. 이는 열우당 왼쪽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 절실함을 보여 준다.

월간 ≪말≫ 2월호에서 고원 한국정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열우당은 이미 자력 회생의 동력을 잃어버린 듯하지만 그 공백을 사회주의[민주노동당]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요약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인 '반한나라당 전선'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반열우당 전선도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반한나라당 전선'은 개혁 배신자들과 손을 잡으라는 요구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사회 진보를 추구하는 운동을 결국 마비시킬 것이다.

'미래구상'의 대선 구상도 이 점이 여전히 모호하다. '미래구상' 안에는 민주노동당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우당 개혁파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열우당 이탈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미래구상'과의 연계를 들먹였다.

그러나 열우당 왼쪽의 대안은 노무현 · 열우당(또한 그 후신)에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의 개혁 배신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에게 적절한 선거 대안이 될 수 있고, 한나라당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점이 '반한나라당 전선'이나 '(열우당) 비판적 지지'를 주장해 온 일부 좌파 민족주의자 동지들의 맹점이다. 이런 입장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독립을 해치고 열우당의 배신과 우익의 득세 모두에 맞서기 힘들게 만들었다.

'반한나라당 전선'

반면, '다함께'의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제안은 한나라당과 열우당(또한 그 후신)을 분명히 반대한다. 일부 좌파 민족주의자들처럼 이 제안을 '반한나라당 전선론'으로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차이를 흐리며 '비판적 지지론'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제안은 열우당에 실망했지만 한나라당도 대안이 아니라고 느끼는 대중을 사이비 개혁 세력과 열우당 아류들이 낚아채게 놔두지 말자는 제안이다.

최근 〈진보정치〉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범진보진영이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원이 66.7퍼센트에 달했다.

광범한 진보세력의 단일후보 선출은 '반한나라당 전선' 류의 '비판적 지지' 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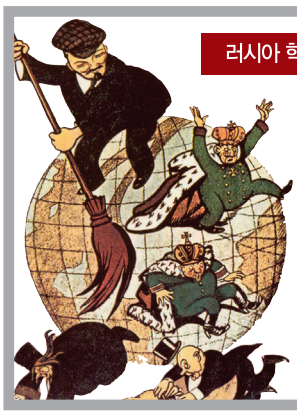
한편, 민주노동당 안에는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비판적 지지'의 아류쯤으로 곡해하며 진취적 시도와 모험 자체를 거부하는 동지들도 있다. 대선이라는 특정 국면에서 당의 틀만을 고집하지 않고 진보진영의 폭넓은 연대 속에서 외연을 넓히려는 진취적 시도를 거부하는 것은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의 다른 일부 동지들은 민주노총 · 전농 등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제'를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더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폭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안의 사고 범위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함께'가 제안하는 것만큼 폭넓지 않다. 즉, 열우당에서 왼쪽으로 이탈했지만 민주노동당 지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광범한 대중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민중경선제'(또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범위는 사실상 민주노동당 스펙트럼을 벗어나지 않아 협소하다.

사실, 그 동안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은 안타깝게도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제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범진보진영의 단결을 주도한다면 훨씬 더 넓은 지지기반과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규한



러시아 혁명 90주년 기념 토론회

20세기를 이해하는 열쇠 –

러시아 혁명의 희망과 좌절

2월 4일 일요일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1:00~2:40 제정 러시아와 10월 혁명
3:00~4:40 내전과 소비에트 러시아
5:00~6:40 스탈린 반혁명과 스탈린주의 러시아
※ 10:30~12:00 에이젠슈테인 감독의 ?10월? 상영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한울),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책갈피) 저자
최일붕 주간 〈맞불〉 편집자,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책갈피), ≪개량주의와 변혁전략≫ (다함께), ≪개량인가 혁명인가≫ (다함께) 저자.

참가비 : 3,000원 | 주최 : 다함께 | 문의 : 02-2271-2395 | atgmail@nate.com | http://www.alltogether.or.kr

한나라당의 진흙탕 개싸움

'유신공주'냐 '개발독재 불도저'냐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둘러싼 이명박과 박근혜의 진흙탕 개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은 "이명박의 명자는 '명치유신'의 명자고, 박자는 '이등박문'의 박"이며 "이명박의 일본 이름은 아키히로"라는 둥 이명박에게 '친일' 이미지를 덧씌우려 애썼다. 사실, '친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박근혜의 정치적 · 생물학적 아버지인 박정희인데도 말이다.

이명박도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생 4명을 키워 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며 박근혜를 공격했다. 그러자 박근혜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이명박의 병역 면제 의혹을 건드렸다.

그러나 사실, 이 둘 사이에 진정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후보 검증' 운운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은 누가 더 독재자 박정희에 가깝냐를 두고 다퉜다.

이명박은 박정희를 따라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경부운하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며 악취나는 개발독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 애썼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일관성이 없다"며 자신이야말로 박정희의 '살아있는 화신'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30년 만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들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특히 인혁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두고 "가치없는 것이며 모함"이라 힐난했던 '유신공주' 박근혜는 "연좌제" 운운하며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 했다.

박정희

또, 이들은 현대차노조의 성과급 투쟁 때도 "공공의 적"(박근혜),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명박)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경부운하'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이나 '열차 페리'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박근혜나 대선에서 한탕 하겠다는 전략은 마찬가지다.

만날 때마다 "경선 승복"을 다짐하지만, '유신공주'와 '개발독재 불도저'의 이전투구는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내 지지기반이 확고한 박근혜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발 정계개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손학규가 범여권 대선후보로 갈 것이라는 얘기도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 캠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무성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퇴출하고 "한나라당의 간판을 내려 …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의 건전 보수들을 영입"하자는 보수대연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도, 38.9퍼센트가 차기 정부의 이념 성향이 '진보'이길 바랐고(반면, '보수'는 17.3퍼센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자는 의견도 82.2퍼센트였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소는 "높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나라당의 대선가도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조명훈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연속혁명'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 하먼은 혁명의 미래를 위한 투쟁,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있어야 혁명이 연속적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자신의 정부가 좌경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트로츠키는 혁명이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혁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트로츠키의 말을 따릅시다."

차베스는 이미 국영 석유회사의 수입 일부를 이용해 빈민가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베네수엘라 상층 계급들한테서 분노를 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전력회사와 베네수엘라 최대 통신회사를 다시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 개각을 단행해 장관 두 명을 교체했다. 그들은 각각 차베스를 지지하는 선거 동맹에 포함된 두 사회민주주의 정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새 장관 가운데 한 명은 공산당 소속이고, 다른 한 명 — 노동부 장관 호세 라몬 리베로 곤살레스 — 은 차베스에게 "저는 트로츠키주의자입니다" 하고 경고한 인물이다.

곤살레스의 말에 차베스는 이렇게 대꾸했다. "나도 트로츠키주의자요. 나는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네 정당으로 이뤄진 자신의 선거 연합을 해체하고 "통합혁명 정당"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새 정당에는 단지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기존의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수많은 활동가들도 끌어들이자고 주장했다.

급진화

무엇이 이런 급진화를 불렀는가? 주류 언론은 항상 유력한 정치인들의 행동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좌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급진화의 추진력은 아래로부터 나왔다. 매우 온건한 개혁에 착수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우익의] 기도에 맞선 도시 빈민 · 노동자 · 농민 대중의 반발이 바로 그 추진력이었다.

차베스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운동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호응하면서 좌경화했다.

좌경화 분위기의 최근 사례는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가 62퍼센트의 득표율로 승리한 것이다. 이 선거 결과는 우익의 도전을 물리쳤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차베스의 선거운동은 차베스를 지지하는 선거 정당들에 대한 활동가들의 불만도 잘 보여 주었다. 그 정당들은 운동과 괴리돼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관료주의" · "정실주의" · "부패"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차베스는 이런 정서에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 조처들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차베스는 최근 연설에서 "민족 부르주아지"의 구실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베스의 조처들은 부패와 관료주의 — 선거 연합 정당들뿐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위계적 국가 기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 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은 중간계급 지도자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요구들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서 추진력을 얻은 노동자 대중은 자신들의 운명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온전한 사회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일은 위로부터 차베스가 선포 하는 것 — 자신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두 단결해서 하나의 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 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차베스 지지자들 사이에는 베네수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뭇 다른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은 겉보기로는 통합된 정당 안에 서로 다른 네 경향이 존재할 것이라는 뜻이다.

부패에 대한 차베스 자신의 언급은 그가 이런 실책의 일부를 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새 정당 결성 호소는 사회뿐 아니라 국가도 개혁하려는 노력에 모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건설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연속혁명은 위로부터 변화를 시행하려는 노력 이상을 의미한다.

칼 맑스는 1848~49년에 일어난 혁명들을 분석하며 처음으로 연속혁명 사상을 창안했다. 레온 트로츠키는 1905년 러시아 혁명 뒤에 이 사상을 채택했다.

그들이 주장한 연속혁명은 민주적 정치 변혁 요구를 둘러싸고 시작된 운동이 노동자 대중을 동원해 행동에 나서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이 혁명적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은 중간계급 지도자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요구들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서 추진력을 얻은 노동자 대중은 자신들의 운명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온전한 사회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일은 위로부터 차베스가 선포 하는 것 — 자신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두 단결해서 하나의 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 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차베스 지지자들 사이에는 베네수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뭇 다른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은 겉보기로는 통합된 정당 안에 서로 다른 네 경향이 존재할 것이라는 뜻이다.

첫째는 국회의원들과 일부 선출직 관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데, 정부가 대기업이나 우익들과 더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다.

둘째는 그 지지자들이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데 찬성하지만, 아주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들은 혁명 과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단일 정당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국가 통제

셋째는 쿠바와 비슷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베네수엘라에는 쿠바를 적대시하는 미국 때문에 쿠바를 모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대중에게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운영 방식인 사회주의를 쿠바에서 찾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쿠바 지도자들이 받아들인 사회 운영 모델은 옛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다. 이 말은 쿠바에서는 노동자 · 농민 대중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토론하고 투표할 권리나 심지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할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늘날 쿠바는 사회주의 사회 운운하지만 부와 소득이 엄청나게 불평등한 사회다.

쿠바 모델 지지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이용해 국가가 산업을 통제하고 단일 정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체제를 건설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이 스스로 직접 결정하려 한다면 당장 운동을 저지하려 들 것이다.

그들의 태도가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지난해 봄에 드러났다. 베네수엘라의 새 노총인 UNT 대의원대회에서 다수파 대의원들은 노조 간부들을 제대로 선출하고 노조를 노동계급 민주주의의 기구로 만들자는 데 찬성했다.

그러자 소수파 대의원들은 선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회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그들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혁명 과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것은 맑스와 트로츠키가 주장한 연속혁명과 정반대이다. 그것은 노동자 대중이 민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혁명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태도이다.

혁명적

마지막으로, 진정한 혁명적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의 활동가들은 노동자 · 도시빈민 · 원주민 · 농민 대중이 그들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연속혁명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런 조직 가운데 하나가 '계급투쟁 경향'(La Tendencia de Lucha de Clases)이다. 그들은 UNT의 다수파이고, 새 노동부 장관의 트로츠키주의와는 사뭇 다른 트로츠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또 다른 조직은 '우리의 투쟁으로'(Por Nuestras Luchas)라는 조직이다. 이들은 도시 게릴라 전통과 자율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빈민 · 농민 · 원주민 조직화를 추구한다.

20세기의 위대한 혁명 운동들에서 연속혁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민주적 기구인 노동자 평의회를 아래로부터 건설하고 다른 피착취 · 피억압 대중을 지도한다는 뜻이었다.

작업장에서 착취에 저항하는 공동 투쟁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은 농민이나 도시빈민보다 투쟁 속에서 유기적 단결을 발전시키기가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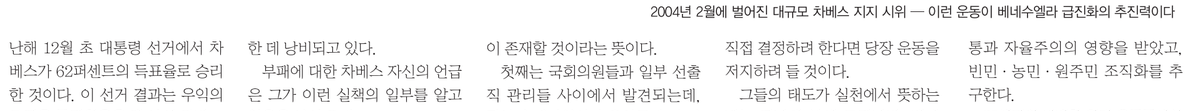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환멸은 광범해, "민중 권력"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앞의 세 경향들은 단지 정부와 대중 사이에서 중재하도록 선출된 평의회들이 민중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혁명이 진정한 연속혁명이 되려면 노동자들이 이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민주적 기구들을 건설해야 하고,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만연한 빈곤과 엄청난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기존의 부패한 국가 구조를 대체하고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토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운동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회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 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갈 길은 아직 멀다. 혁명이 정말로 기존 사회를 뒤집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그래서 피착취 대중이 지배계급이 될 때까지 나아가려면 말이다.



2004년 2월에 벌어진 대규모 차베스 지지 시위 — 이런 운동이 베네수엘라 급진화의 추진력이다

활기와 열정이 넘친 케냐 세계사회포럼

김광일

알렉스 캘리니코스도 말했듯이, 이번 케냐 세계사회포럼(WSF)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조직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등록자수가 5만 명이었다. 그러나 케냐 자체가 사회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규모는 아니다. 소말리아와 수단 등 아프리카 곳곳에서 사람들이 왔고, 남아공에서도 1백40여 명이 참가했다.

분위기도 매우 좋았다. 각 단체들의 시위와 행진 때문에 워크숍이 방해될 만큼 활기가 넘쳤다.

반전 총회는 그 동안 내가 참가했던 WSF의 그 어떤 총회보다 역동적이었다. 아마도 지난해 레바논 전쟁에서의 승리, 부시의 중간선거 패배가 영향을 끼친 듯했다. 내용들도 좋아서 "이슬람 혐오 반대, 시민적 자유 옹호" 슬로건이 큰 박수로 채택됐다.

행사장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22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는데 22일과 23일은 소말리아 사회포럼과 함께 행진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팔레스타인 시위와 합쳐져서 2백여 명이 넘는 시위대가 형성됐다. 행사장에서 벌어진 시위 중에서 최대 규모였다.

다만, WSF 기간 중에 전체 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 마지막날 사회운동 총회가 유일한 전체 회의였다. 각 의제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행동을 호소하는 회의였는데, 8백여 명이나 모였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다. 이런 전체 행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무료 입장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아프리카인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터에 WSF 등록비 7달러는 너무 비싸다는 항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행사장 한복판의 현 케냐 내무부장관 — 식민지 시절 고문 기술자로 활동했고, 억압 정책을 추진했던 — 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하자는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그 식당은 마지막 날 폐쇄됐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전체 행사에 무료 입장이 결정됐다. 사회운동 총회 결의문에도 "세계사회포럼의 상품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폐막 행진은 규모가 작았다. 키베라 다음으로 규모가 큰 카리오방기라는 빈민가를 가로질러 행진했다. 행진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

특히, 한 초등학교를 지날 때 아이들이 모두 울타리로 몰려나와 시위대열을 환호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대열을 울타리 앞으로 이끌고 가서, Free Education, Free Children 등을 외쳤다. 아이들도 함께 외치더니 우리 팻말을 보고 "No More Bush"를 스스로 외치기 시작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케냐 세계사회포럼은 아프리카에서도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맞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케냐 세계사회포럼의 흥미진진한 워크숍

- 반전 운동 총회 심층 보도
- '21세기 혁명 —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해방을 위한 급진적 대안'
  남아공과 짐바브웨, 보츠와나, 영국의 연사들은 끔찍한 빈곤과 전쟁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할 때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전쟁과 제국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윌든 벨로, 이집트의 사미르 아민 같은 저명한 활동가들이 제국주의 체제와 그에 맞선 저항을 논의한다.
- 대중 행동 — 빈곤에 맞서 싸우는 방법

빈민가를 가로질러 행진한 시위대열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 평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에게 2007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에 대해 물었다*

저는 케냐 세계사회포럼이 대체로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운동들, 특히 케냐의 운동들이 참가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죠.

케냐 사회포럼은 역동적이었고, 이것은 그동안 빈민 운동이 발전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먼저,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이 취약하고 급진 좌파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몇 가지 부정적 결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직이 엉성했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케냐 사회포럼을 조직한 케냐 운동 세력들의 약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타협을 했고, 그 때문에 케냐 참가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둘째, 역대 어느 사회포럼보다 NGO들의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이전의 세계사회포럼과 유럽사회포럼은 대부분 강력한 운동과 급진 좌파가 존재하는 곳에서 열렸고, 그 덕분에 행사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일례로, 3년 전의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이 가장 성공적이었는데, 이는 규모 때문에 아니라 반제국주의 분위기가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케냐 세계사회포럼의 또 다른 정치적 문제점은 파편적 성격이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들을 배치했지만 이들은 엉성하게 조직됐고, 참가자 수도 작았습니다.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때는 달랐습니다. 그 때는 대규모 개막식이 열렸는데, 단지 춤과 노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룬다티 로이의 감동적인 반제국주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냐 사회포럼은 장점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단지 케냐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회포럼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결할 수 없고 다양한 캠페인과 쟁점 들을 결합시킬 수 없고, 그저 한 곳에 뒤죽박죽 섞어 놓을 수 있을 뿐이라는 운동 내 우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사회포럼이나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것은 분명 후퇴입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와의 인터뷰 전문은 지면과 온라인 기사로 조만간 실을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는 국제 연대를 향하여"
Fifth Cairo Conference
제5차 카이로회의
2007. 3. 29~4.1
Fifth Cairo Conference

이집트의 저항 활동가들은 전 세계 반전 조직과 각종 단체 들에게 2007년 3월 29일~4월 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제5차 카이로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년 동안 국제 반전 운동 조직, 노동조합, 급진 정당과 민족해방 운동 조직 들이 카이로회의에서 함께 어울렸고, 카이로회의는 아랍 세계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둘러싼 논쟁에 영향을 미쳐 왔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돼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돼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자본주의와 가족

나는 지난 칼럼에서 여성 차별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가족의 형성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주의 탄생과 함께 가족의 구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다.

산업 자본주의 전에 존재한 농민 가족은 생산 단위였다. 남성은 가정의 우두머리이지만 여성과 자녀들도 집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가계 소득에 기여했다.

여성과 자녀들은 가족 농경지에서 일하고 가축을 돌봤다. 여성은 당시 사회의 핵심 경제 단위인 집단적 촌락 생활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산업혁명은 이런 생활 방식을 완전히 파괴했다. 노동 대중은 토지에서 쫓겨나 새로 등장하는 도시들로 몰려들었다.

역사상 최초로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노동계급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계급의 구성원들은 임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해야 했다.

옛 사회적 연계들이 파괴되고, 한동안 노동자의 가족도 해체되는 듯했다.

부부와 자녀들은 모두 공장과 광산 등에서 끔찍한 노동조건 아래 일했다.

엄청나게 많은 여성이 방직 공장에서 일했다. 1856년에 방직업 노동자의 57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아이들은 17퍼센트였다.

여성은 종종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가장 힘든 일을 했다. 1850년대에 올덤에서는 여성 8명 중 1명이 25~34세 사이에 죽었다.

자본주의의 이런 야만성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정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거나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해방되기를 바랐다. 노동자들은 남성이 아내와 자녀 부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산업혁명기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요구가 순전히 남성에게 유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남성이 가정에서 여성을 계속 억압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임금 덕분에 남성 한 명의 임금으로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같은 액수의 임금을 벌기 위해 일가족 서너 명이 일해야 했다. 그래서 가족임금 덕분에 여성과 아이들이 힘든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의 가혹한 현실에서는 가정에 고립되는 것이 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하는 것보다 나았다.

대다수 여성에게는 '믿을 만한 밥벌이꾼'을 남편으로 삼는 것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였다.

'사적 가족'

그러나 이런 '사적(私的) 가족'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된 것은 단지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다. 자본가 지배계급은 '가정 가치관'을 노동자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차세대 노동자 양육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공짜로 전가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 건설됐다. 이것은 과거의 낡고 허름한 오두막들보다 크게 나아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택들은 핵가족 구조에 맞게 건설됐다.

이런 집은 보통 분리된 침실들과 부엌으로 이뤄졌고, 어떤 경우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앞마당이나 작은 정원도 있었는데, 이것은 부모 두 명과 자녀 몇 명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남성의 집은 그의 성(城)이다" 같은 말이 등장했다.

물론 많은 노동계급 여성은 여전히 가정 밖에서 일했지만, 이제 가정주부가 여성의 주된 구실이 됐다.

이와 함께 현모양처의 전형적 특징 — 헌신성·수동성·순종성 — 이 나타났다.

다시 한 번 여성의 기여가 평가절하됐다. 모든 것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성이 공짜로 하는 노동은 무가치해 보였다.

노동계급 남성은 자본주의의 사적 가족 형성의 주된 수혜자가 아니었다. 남성이 밥벌이꾼 구실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성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면 그는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무시당할 수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의 끔찍한 현실에서 가족은 노동자들이 쟁취한 피난처이자 지배계급의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수단이 됐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얻으면서 여성의 기대 수준도 다시 높아졌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상적인 가족상과 오늘날의 여성 해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샐리 캠벨

Forums

서울 동부

기후 변화 –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2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동부여성플라자(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서울 중부

열우당의 붕괴와 진보 정당의 미래
2월 14일(수) 오후 8시 | 장소: 추후 공지
연사: 전지윤(주간 〈맞불〉 공동 편집자)
문의: 019-647-3309

〈맞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맑스주의와 억압

존 몰리뉴

맑스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 특히 대학가에서 흔한 — 비판 가운데 하나는 맑스주의가 인종 차별, 성 차별, 동성애 혐오 같은 억압[이하 '천대'로 용어 변경]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맑스주의가 흑인 · 여성 · 동성애자 등은 그들의 투쟁을 계급투쟁에 "종속"시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그저 사회주의 혁명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계급 문제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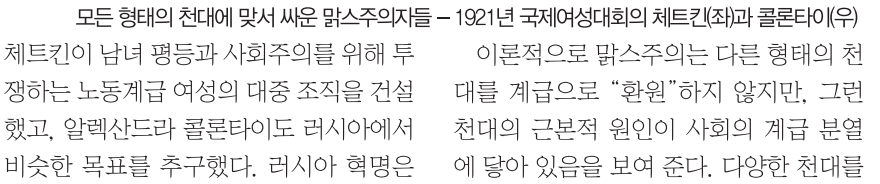
이런 주장들에 이론적으로 답하기 전에, 역사적 경험은 맑스주의와 맑스주의 조직들이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기는커녕 모든 형태의 인종 · 성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도적 구실을 했음을 보여 준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겠다.

예컨대, 노예제 문제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를 강력하게 지지했을 뿐 아니라 많은 영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미국 남부산 면화에 달려 있었는데도 영국 노동자 운동이 북부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했다. 맑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흑인 노동자가 사슬에 매여 있는 한은 백인 노동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맑스와 엥겔스는 아일랜드인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19세기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를 제기하며, 아일랜드인들에게 사회주의 사회를 기다리라고 말하기는커녕 영국 혁명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일랜드의 분리 ·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사슬

여성 해방이라는 주제는 맑스와 엥겔스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맑스는 이렇게 썼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성의 열정적 동참 없이는 위대한 사회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야말로 사회 진보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1884년에 엥겔스는 맑스의 노트를 이용해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썼다. 이 책은 여성 천대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맑스의 딸인 엘리너 맑스는 런던 이스트엔드의 노동계급 여성들을 조직했을 뿐 아니라 〈여성 문제〉(The Women Question)라는 중요한 소책자를 쓰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제1차세계대전 전에 클라라 체트킨이 남녀 평등과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계급 여성의 대중 조직을 건설했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도 러시아에서 비슷한 목표를 추구했다. 러시아 혁명은 여성의 법률적 평등을 철저하게 확립했고 동성애도 합법화했다. 당시 영국 여성들은 아직 투표권도 없는 상태였다.



모든 형태의 천대에 맞서 싸운 맑스주의자들 – 1921년 국제여성대회의 체트킨(좌)과 콜론타이(우)

미국 공산당이 비록 스탈린주의 조직이긴 했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30년대에 뉴욕 할렘 지구와 미국 남부지방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해 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흑인 운동과 여성 운동에서 맑스주의자들은 중요한 구실을 했다. 나찌 홀러코스트의 피해자인 유대인 맑스주의자 아브람 레온은 ≪유대인 문제≫(The Jewish Question)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유대인 혐오의 기원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여전히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돼, 전 세계의 맑스주의자들은 이슬람 혐오라는 새로운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이런 역사적 경험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 이론적 토대가 있다. 맑스주의의 정치적 목표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국내적 · 국제적 단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약화시키거나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구조적 · 이데올로기적 천대 — 인종 차별, 성 차별, 동성애 혐오 등 — 에 맞서 싸울 절대적 의무가 있다.

이론적으로 맑스주의는 다른 형태의 천대를 계급으로 "환원"하지 않지만, 그런 천대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의 계급 분열에 닿아 있음을 보여 준다. 다양한 천대를 계급으로 환원하는 것과 그런 천대의 근원이 계급 분열임을 보여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가족(가정)

맑스주의는 여성의 열등한 처지가 가족 구조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구조는 육아와 가사를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여성을 유급 노동이나 공적 생활과 단절시키거나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운다. 앞서 말한 ≪가족의 기원≫에서 엥겔스는 수렵 · 채집 사회에서 목축 · 농업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성 지배 가족이 발전했음을 보여 주었다. 또, 사유재산과 계급 분열의 등장과 함께 가족은 재산 상속을 확립하고 아내를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수단이 됐다.

가족 형태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육아와 가사의 주된 장소이고 여성의 종속을 뒷받침하는 주요인이다. 자본가 계급이 입으로는 아무리 남녀 평등을 떠들더라도 그들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그들은 여성 차별 덕분에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 대중을 확실하게 분열시킬 수 있다. 그들이 동성애를 비난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가족 제도로부터의 일탈이자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는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종 차별을 노예 무역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자 정당화로 본다. 노예 무역을 통해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의 면화 · 담배 · 설탕 플랜테이션[대농장]으로 옮겨져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이런 식민지들에서 진행된 자본의 시초 축적(약탈)은 16 · 17 · 18세기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인종 차별은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을 장악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를 거치며 더 세련되고 강화됐다.

오늘날 우리 곁에는 이런 역사적 유산이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그것[수정된 형태의 인종차별]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에 딱 좋은 속죄양이고 '이간질시켜 각개 격파하기'의 또 다른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다 서방 제국주의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부산물인 이슬람 혐오도 더해야 한다. 그들[서방 제국주의자들]은 '테러와의 전쟁' 운운하지만, 사실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지배하고 장차 중국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맑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은 다른 관점들이 흔히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첫째는 인종 차별과 성 차별 등이 무지에서 비롯한 편견일 뿐이고, 따라서 교육만으로도 언젠가 극복될 것이라는 피상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관점이다. 둘째는 이와 정반대로 그런 편견이 '자연스런' 것이고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둘은 흔히 서로 보완한다. 둘 다 천대에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유물론적 관점은 천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강화한다.

맑스주의가 인종 차별, 성 차별, 동성애 혐오를 철저하게 근절하려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혁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맑스주의는 모든 형태의 천대에 반대하는 투쟁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이다.

3월 개강 맞이 강연회

2007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8가지 주제

박노자(〈당신들의 대한민국〉의 저자),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 〈프레시안〉 기획위원), 우석균(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
여러 진보적 연사들이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이라크 전쟁 4주년, 기후 변화, 한미FTA,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등 8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대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립니다. 2007년 3월 10일~11일 주최: 대학생 '다함께' 참가 문의: atgstudent@hanmail.net / 02-2271-2395

노태우보다 더한 노무현 정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송재혁(전교조 조합원)

연초부터 전교조는 벌집 쑤시듯 공격받고 있다. 1989년 창립 당시 노태우 정권의 대규모 해직 탄압 이후 또 다른 노정권이 대규모 징계와 사법처리라는 최대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는 교원평가 · 성과급 · 연금법 개악 · 한미FTA를 저지하고 학교 자치와 학생인권법, 참교육을 쟁취하고자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에 정부는 경고 · 주의 등 행정처분 외에 정식 징계 대상으로 4백 명 이상을 선정해 지역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는 징계 양형을 견책이나 감봉으로 미리 정해 놓았는데, 이는 경징계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중징계다.

8천 명이 넘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 중 2001년과 2003년 투쟁 가담 '경력'까지 들춰서 4백여 명을 '선별'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해 놨는데도 교육부와 상급 교육청은 하루에 15~20명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징계위원들은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서 시간 제약을 핑계로 진술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한 뒤 교사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

1월 26일 밤 12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던 서울 남부교육청 징계위 현장에서는 진술하거나 대기중이던 여교사 두 명이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29일에도 한 교사가 끌려나오다 허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울산에서는 이가 부러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교사도 있다.

한 교사는 "1989년에도 지킬 것은 지켰지, 이렇게 야만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개탄했다.

전치 2주

정부가 이렇게 징계를 강행하는 이유는 2월 초중순에 있을 교사 정기전보 때 징계교사들을 타교로 부당 전보시키려는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중인 교원평가제 입법화, 성과급제 확대, 한미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전교조의 발을 묶어 두려는 게 더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교육부는 징계가 진행되는 사이에 전국 5백여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규모 성과급 반납 투쟁 때문에 주춤하던 저들은 징계 국면을 이용해 성과급도 다시 확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공안당국은 이른바 '선군정치 포스터 유포 혐의' 등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교사 2명을 1월 18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이런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은 통일 교육뿐 아니라 전교조 자체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는 공안 책동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투쟁 지도부를 사법처리해 오다가, 이번에는 투쟁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오판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밟힐수록 강해졌다. 합법 연가를 불법 징계하는 관료들을 전교조와 양심적인 단체들의 힘으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에 맞서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50만 명이 전쟁 중단을 외치다

지난 1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 이 날 시위를 조직한 미국의 반전 단체 '평화정의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는 시위 참가자가 무려 5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003년 이라크 침략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 가운데 하나고, 최초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주변을 완전히 둘러쌀 수 있었다.

이 날 시위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성이었다. 학생들, 왕년의 반전 활동가들, 노동조합 활동가, 유명 영화 배우 등이 참가했다.

특히 시위 대열 곳곳에서 많은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볼 수 있었다. 집회 순서 중에는 참전 군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너무 많아 넓은 연단이 순식간에 꽉 찰 정도였다.

집회 분위기는 밝고 힘차고 급진적이었다. 사람들은 최근 부시의 증파 결정에 엄청나게 분노했고 이라크 점령 중단, 이란 확전 반대 구호를 크게 외쳤다. 또, 연단의 연사가 부시를 비판할 때마다 "부시를 탄핵하라!"는 호응이 대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부시를 탄핵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부시 정부뿐 아니라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많은 연사와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 줬음에도 의회가 상징적 성격의 증파 반대 결의안 외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시위 대열에서 "나는 평화를 위해 투표했다" 등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팻말들을 흔히 볼 수 있었고, 2004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존 케리를 지지했던 영화 배우 수잔 서랜든은 "이라크 사망자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정치인들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중의 이런 급진적 분위기는 이 날 시위에 참가한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커다란 압력이 됐다. 이 때문에 심지어 연단에 섰던 한 민주당 의원조차 당장 전쟁 예산 지원을 중단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행동을 비판해야 했다. 분명, 이 날 시위는 미국 주류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부시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분노하고, 이라크 점령의 위기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처럼 규모가 크고 급진적인 반전 시위가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27일 워싱턴 시위에서 나타난 대중의 분노와 자신감을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간다면 부시 정부의 위기를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반전 운동은 워싱턴 시위의 열기와 정서를 3월 17~20일 전쟁 반대 국제 행동 조직으로 이어가야 한다.

김용욱